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종 입장

1. 대한민국은 2008년 UPR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유엔회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상호 점검하고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UPR의 목적과 정신을 수호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 이전 두차례 UPR 보고서의 작성·정부의 입장 수립과 이행점검의 전 과정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인권증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왔고, 이번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의견을 작성하여 제37차 유엔인권 이사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2018년 1월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검토의견을 표한 권고를 포함하여 UPR 권고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권고 내용에 대한 찬반을 표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이행을 담당해야 하는 관계부처·기관의 최종적인 권고 수용여부 관련 의견을 종합해 정부의 입장을 본 보고서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4. 대한민국은 제28차 UPR 실무그룹 보고서에 이미 수용의견을 밝힌 85개 권고, 참조 의견을 밝힌 3개의 권고 외에, 총130개 권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36개 권고는 수용, 94개 권고는 참조한다는 입장을 본 보고서에 기재 하였습니다.
5. 일부 권고는 우리의 법과 현실에는 맞지 않는 권고도 있고,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도입하라는 권고도 있었으며, 사회적 논란이나 정부의 기본적 입장과 차이가 있어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그러나, 그러한 권고를 거부(reject)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note)하도록 한 UPR 메커니즘의 취지는 권고의 내용을 살펴 회원국이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도록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뜻을 반영한 것입니다.
7. 그러므로 당장 수용하지 못하거나 권고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법제도 및 사회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회원국들이 대한민국 인권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우려와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두루 살펴, 국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제적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국제적 의무의 이행 및 국가인권기구

8.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2.1-132.3, 132.9, 132.10, 132.19-132.23를 수용합니다.

9. 권고 132.20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의 유보 사유와 관련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 입법이 진행되면 유보를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2.4-132.8, 132.11-132.18, 132.24-132.25를 참조합니다.

11. 권고 132.16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 상기 협약보다 강력하고 체계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을 이미 비준하였으므로, 상기 협약 가입의 실익 등 관련 사항을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12. 권고 132.17에 대해, 침략범죄 개정안 비준 여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금번 총회시 채택된 결의의 법적 효력 및 ICC의 재판 관할권 행사 범위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3. 권고 132.18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이 개별 국가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점진적인 핵군축에 배치되는 점을 감안해 상기 유엔총회 결의에 반대 투표를 하고 협상회의에도 불참하고 있습니다.

14. 권고 132.4-132.8, 132.11-132.15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기타 미가입 조약의 비준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 이행시 국내법의 상충여부,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 비준에 따른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평등 및 비차별 원칙

15.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2.28-132.31, 132.33-132.34, 132.37, 132.41, 132.42, 132.46, 132.47, 132.49-132.55를 수용합니다.

16. 권고 132.30 및 132.46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인종 차별이나 외국인 혐오 방지를 위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로 외국인 혐오 방지 및 인종차별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7.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2.26, 132.27, 132.32, 132.35, 132.36, 132.38-132.40, 132.43-132.45, 132.48, 132.56-132.68을 참조합니다.

18. 권고 132.36, 132.44, 132.65 전단 및 권고 132.26, 132.27, 132.32, 132.35, 132.38-132.40, 132.43, 132.57-132.62, 132.64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과 90여개의 개별 법률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차별행위에 대한 일반적 구제절차를 규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차별금지 사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여 국민적 공감·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특히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19. 권고 132.44, 132.45, 132.65 후단과 권고 132.66-132.68과 관련하여,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른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 처벌 여부와 위헌성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바,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20. 권고 132.48 및 132.56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혐오표현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형사법 체계상 범행의 동기는 양형조건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1. 권고 132.63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사적영역에서 실시되는 전환치료를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인권

22.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2.69를 수용합니다.

23.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개발협력사업에 있어 인권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명·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불처벌과 법의 지배 등 사법 행정

24.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2.70-132.93을 참조합니다.

25. 권고 132.70-132.89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사형제 폐지와 집행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국민 여론과 법감정,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26. 권고 132.90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 판결의 법 해석 기준과 취지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임의 적용으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감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임의로 석방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7. 권고 132.91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은 폭행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가혹행위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행법상으로도 고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가혹행위에 포함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28. 권고 132.92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으로서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부부강간죄는 이미 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9. 권고 132.93과 관련하여, 현재 미군 범죄에 대한 불처벌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군 범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자유,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30.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2.106을 수용합니다.

31.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2.94-132.105, 132.107-132.111을 참조합니다.

32. 권고 132.94-132.105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처벌 여부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바, 정부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현실, 병역의 형평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33. 권고 132.108 후단과 권고 132.109-132.111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은 분단 국가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법 해석의 기준과 취지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에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동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향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 적법절차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 금지와 여성·아동의 권리

34.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2.112, 132.113, 132.122를 수용합니다.

35. 권고 132.113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확대를 위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 12. 19.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여성 후보자 추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는 등 여성 국회의원 비율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6.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2.114-132.121, 132.123, 132.124를 참조합니다.

37. 권고 132.114, 132.115와 관련하여, 낙태죄를 폐지하거나 낙태의 허용 한계를 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생명·신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비롯해 해외 입법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38. 권고 132.116, 132.117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은 불법행위이며, 그러한 시술도 현재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39. 권고 132.118-132.121, 132.123, 132.124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주한 자국대사관 등을 통하여 출생등록이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 업무 시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모가 난민인정 (난민신청, 인도적 체류허가 포함) 의 사유로 국적국에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의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그 부모와의 생물학적 관계가 확인되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체류허가(외국인 등록 포함)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난민, 난민신청자 및 국내이산민

40.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2.127-132.129를 수용합니다.

41. 권고 132.128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비자 연장·갱신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이력과 무관하게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2.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2.125, 132.126, 132.130을 참조합니다.

43. 권고 132.126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이들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에 대해서는 체류자격과

관련 없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난민법」('13. 7. 1. 시행)을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생계비와 주거시설, 의료지원, 교육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불문한 주거, 의료, 교육 서비스의 완전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필수적 혜택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44. **권고 132.130**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취학 중인 불법체류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마칠 때까지 단속을 자제하고,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며,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명령 처분을 하지 않는 등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를 연장하거나 합법화하는 데에 아동을 이용하는 등 부작용 위험이 있고, 형사범죄자의 경우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구금의 전면 중단은 수용이 어렵습니다.